

최저임금 차등적용 다시 수면위로

김동연 “최저임금 지역별 차별화 내부 검토중”

노사 간 이견 커 논의·실제 적용 쉽지 않을 듯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하는 경영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 노사 의견 차이가 커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회(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임을 확인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됐었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올해 7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계기로 불거졌지만, 논란 자체는 오래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구

분으로 구분해 적용한 이후로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한 적이 없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 때는 차등적용 문제가 큰 논란거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자 경영계에서 차등적용 방안을 들고나왔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이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 적용에 차등을 뒤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매출 규모가 큰 대도시 편의점과 농·어촌 편의점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뿐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청년과 고령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

으로 보고 강하게 반대한다. 업종, 지역, 연령 등에 따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노·사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년 9월~올해 3월 운영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의제에도 포함됐다.

당시 TF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지역 낙인 효과가 발생하면 노동력 수급을 왜곡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도 해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TF의 판단이었다.

외국에서는 각국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업종과 지역뿐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 /연합뉴스

정치 브리핑

손금주 “수협 면세유 부정유통 3년간 1,155배 늘어”

수협의 면세유 부정유통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의원이 3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총 35명이 적발됐으며, 추정액이 7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명이 적발돼 물량 400ℓ에 대해 10만원의 추정 세액이 부과됐으나 2017년에는 21명에 물량 462㎏이 적발돼 6억700만원의 세액이 추정됐다. 3년 사이



부정사용 적발이 물량으로 1,155배, 금액으로는 6,070배에 달하며 1인당 부정수급액 역시 10만원에서 2,890만원

으로 289배 뛰었다.

손금주 의원은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강력한 처벌과 면세유 취급 교육 등 적법한 사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주 “최근 5년 중기 기술유출 피해 6,700억”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현재) 퇴직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5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이용주(여수 갑)의원이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1개사의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30건으로 이중 56.6%인 17건이 퇴직자에 의한 기술 유출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운영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를 통한 기술 유출방지 상담은 2016년 3,935건,



2017년 5,128건, 2018년 전반기 3,465건으로 2016년 개소 후 만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1만2,500여건을 넘었다.

이용주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6,700여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다 면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오늘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세미나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을) 최고 위원이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고용 및 근로조건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 1년 단위 재계약에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에도 불구하고 고용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이성일 위원장(공공연대노동조합)이 ‘생활체육지도자 근로조건 실태와 고용 안정성 보장’을,



공경호 오산대 교수가 ‘생활체육지도자 근로조건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경환 최고

위원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 또한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도를 받을 수 없다”며 “지도자가 지자체에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2일 강원도 철원군 5사단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군인들이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남북은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 지뢰부터 제거하기로 했다. 같은 날 시작되는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는 11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마련

앞으로 점차 늘어날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태양광 폐패널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재

활용 방법·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새로 EPR가 적용되는 품목은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러닝머신, 식품 건조기, 족욕기, 제습기,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등이다.

지금까지 EPR 및 유해물질사용제한(RoHS)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지만 이번에 23개가 추가

돼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EPR은 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RoHS는 전자제품 제조 시 될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23개 품목의 재활용 의무량을 2020년부터 부과할 계획이지만, 태양광 폐패널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1년 이후로 부과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EPR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폭발성 물질과 유독 물질을 함유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리·보관·운반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미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총리 “단군의 후손 남북, 인간세상 널리 이롭게 하길”

개천절 경축사 “포용국가는 단군이 꿈꾼 흥익인간의 길”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단군의 후손인 남과 북이 단군의 소망대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꿈이 실현되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우선 단군이 아사달에 나

라를 세우고, 삼국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일제강점기와 광복,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한민족의 여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침략도, 조국의 분단도 제국주의 야욕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통탄의 상처였다”며 “그 상처를 안고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뉜 채 70년을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문제인정부는 올해 만도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열며

지구 최후의 냉전체제를 허물고 있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려는 담대한 여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 개천절에 우리는 흥익인간 이념을 다시 생각한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께서 바라신 대로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로 발전할 큰 기회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지난달 국가목표로 ‘포용국가’를 선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 또한 단군 할아버지께서 꿈꾸신 흥익인간의 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벨화학상에 미국 아널드·스미스·영국 윈터

9년만에 여성 수상자 배출

올해 노벨화학상의 영예는 미국 프랜시스 아널드와 조지 P. 스미스, 영국 그레고리 P. 윈터 경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이들 3명의 과학자를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아널드는 효소의 유도 진화(directed evolution of enzymes)를, 나머지 2명은 항체와 펩타이드의 파지 디스플레이(phage display of peptides and antibodies)를 연구한 공로로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국 아널드는 9년 만에 탄생한 여성 노벨화학상 수상자다. 마리 퀴리(1911년 수상), 아다 요나트(2009년 수상) 등에 이어 5번째 수상자가 됐다.

노벨위원회는 1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2일 물리학상, 3일 화학상, 5일 평화상, 8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한 뒤 올해는 ‘미투(Me Too)’ 파문 논란으로 문학상 수상자는 1949년 이후 69년 만에 선정하지 않는다.

시상식은 알프레트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생리의학·물리·화학·경제학)과 노르웨이 오슬로(평화상)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노벨상 메달과 증서, 9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억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지난해 노벨화학상은 영국 내 체체 분자를 고화질로 영상화할 수 있는 저온전자 현미경 관찰 기술을 개발한 자크 뒤보셰(스위스), 요아힘 프랑크(독일·미국), 리처드 헨드슨(영국)이 공동 수상했다. /연합뉴스